

친환경 농업 탈출 도미노 전남 올 40%가 인증 포기

힘들게 지어도 제 값 못받아

해남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해온 농민 김모(58)씨는 지난 몇 년간 출기차게 받아왔던 친환경 인증을 포기했다. 김씨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친환경을 고수했지만 더 이상 보탬이 되지 않는데 뭐하러 힘들게 고생하겠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더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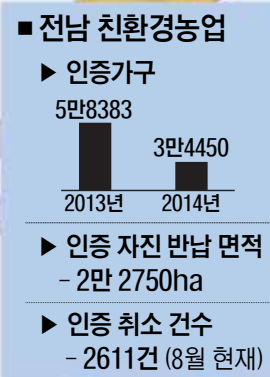
김씨처럼 수년간 공들여온 친환경농업을 스스로 포기한 전남 농가가 올에만 2만 1000가구를 넘어섰다. 사실상 친환경 농업 탈출 도미노로, 지금껏 친환경 농업이 개방화에 따른 ‘대세’로 평가받아왔다는 점에서 ‘농민의 반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일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았던 전남지역 2만1297농가가 올 들어 친환경 농업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 인증 정책을 추진해온 이후 가장 많다.

이들이 지금껏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했던 면적 2만2750ha, 전남지역 올해 친환경 재배면적(4만3300ha)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들의 친환경 농업 포기 선언으로 지난해 5만8383농가에 달했던 전남 친환경 농가 수는 3만4450농가로 급감했고 7만406ha에 달했던 면적도 대폭 쪼그라들었다. 전국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의 45%를 넘어 압도적 1위였던 비율도 39%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친환경농업의 메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완도(3590농가) ▲해남(2390농가) ▲보성(1790농가) ▲고흥



(1650농가) 등으로 전남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농민들이 젊은층이 떠나 노인들이 대부분인 전남 들녘에서 기존 농업에 비해 훨씬 노동력이 많이 드는 친환경 농업에 힘을 쏟았던 데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싼 것’만 찾고 판로도 없는 현재 시장 수준으로는 비싼 생산비와 노동력을 들여서까지 친환경 농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게 농민들 생각이다.

무더기로 쏟아지는 가짜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를 유지하지 못한 정부의 허술한 정책도 농민 포기에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에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해야할 정부 정책이 어설피 개방화의 파고에 맞서는 농민들을 오히려 벼랑끝으로 내몰았다는 비판도 농업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삶이란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새벽 기온이 뚝 떨어지며 올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인 14일 광주 북구청 사회복지행정연구회원 30명이 북구 임동에서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할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100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연탄 3000장을 자비로 구입해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주의·법치 지켜져야 지역갈등 해소”

광주일보·매일신문 주관
‘영호남 상생’ 국민토론회

지역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법치주의 확립과 공천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영호남상생포럼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대통합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도외시키고 무리한 정책을 밀고 나가면 야당과 비판언론의 견제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여론은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왔다”며 “이런

현상이 있으면 지역갈등은 심화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지역갈등이 해소된다”고 처방했다. 이 교수는 또 “영남과 호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천이 당선’이다”며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를 말하기 전에 정치권은 그들의 뒷받침에서 이뤄지는 퇴행적 정치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전정배 전 법무장관은 “국민 사이에서는 지역갈등이 악화하고 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5대 권력기관장을 영남 인사로만 채우는 등 오히려 더 악화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도 호남 낙후와 배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면으로 계속>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리!

- 일시: 2014. 10. 19(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컬처&피플 - 화가 김병중 ▶ 17면

광주일고 출신 서건창 최다안타 신기록 ▶ 20면



광주일고 출신 서건창 최다안타 신기록

광신대학교 설립 60주년 기념 감사예배
일시: 10월21일(화) 오전10시 40분
장소: 광신대 은혜관 3층 대예배실
문의: 062)605-1000

광주은행장에 김한 JB금융 회장 사실상 확정

광주은행 민영화 이후 첫 행장에 김한(60·사진) JB금융지주회장 겸 전북은행장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광주은행과 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은행 인수대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광주은행 편입절차를 마무리한 JB금융지주는 이날 행장추천위원회를 열어 광주은행장 후보로 김한 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은행은 이에 따라 이르면 15일 이

사회를 열어 행장 선임에 관한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20일까지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광주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겸임해 왔던 전북은행장직에서는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그동안 광주은행 인수과정에서 불거졌던 지역간, 노사간 갈등과 오해를 풀고 광주은행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광주와 전북 두 향토은행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꼽혀왔다. 김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거쳐 미국 예일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30대에 대형증권사 임원을 맡아 미국 월가에서 활동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다. JB금융의 대주주인 삼양그룹 창업자



김연수씨의 손자이자 김삼현 전 국무총리의 장남이기도 한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전북은행장으로 부임한 이후 7조원이던 은행 자산을 4년 만에 40조원으로 불리는 등 탁월한 경영 수완을 발휘해왔다.

지역 금융계 관계자는 “광주은행 노조의 반발을 잠재우고 지역민과 정치·사회단체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새 은행장의 당면 과제이자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의 정서를 이해하고 모두를 아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우리 농업 세계로! 미래로!

201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2014 Korea Agriculture Expo

2014. 10.23(목) ~ 11.2(일)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나주시 산포면 소재)

주관

전라남도 JeollaNamdo

후원